

21세기 동북아 평화변영전략 한중일 국제회의 지상중계



박주선 공동위원장 리종일 공동위원장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황따후이 인민대 교수 기미아 동경대 교수 박승준 인천대 교수 팡 중잉 인민대 교수 오가와 에이지 부총장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성 北 참여 유도해야”

21세기 동북아 평화변영과 경제공동체 구축 방안을 위한 국제회의가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동북아 위원회(공동위원장 박주선·리종일)가 주최한 이날 국제회의에는 한국과 중국·일본 3개국 유명 석학들이 참석해 동북아 안보와 평화 체제 정착방안, 경제공동체 구축방안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기조연설=동북아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종일 한국 밀레니엄 연구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날 한국·중국·일본 3개국은 세계의 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영향력이 있다”라며 “이제 우리는 ‘강한 군사력과 부(富)를 가진 나라’ 대신 ‘풍족한 사람들과 좋은 이웃들’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국가의 영광’ 대신 ‘인류의 복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 간의 협조뿐 아니라, 우리는 국경, 이념적 차이, 혹은 정부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국가 간의 협정과 조약에 더해 공동된 국민의 행동강령과 공동된 도덕적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북아 안보와 평화체제 정착 방안=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동북아시아 안보구조는 각 나라의 이슈에 기반해 소규모 다자간 대화와 협력이 나서고 있다”라며 “동북아 안보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이슈별 접근에서 포괄적 안보 대화로, 이후 안보협력으로 발전하는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따후이 중국인민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지역안보에서 한반도 문제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통해 얻은 성과를 보고 안정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한층 더 커질 것이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안정화 장치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미아 다다시 동경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남북경제협력과 북일 경제협력을 통합하는 대북연합 포용정책을 제시하며



동북아 위원회(공동위원장 박주선·리종일)가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평화변영 전략 한·중·일 국제회의'가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국제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유명 석학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현백기자 choi@kwangju.co.kr

한·중·일 공동된 국민강령·도덕적 법규 필요

대북연합 포용정책으로 북 핵포기 이끌어야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야 한다”라며 “특히 한국은 북한의 문제를 민족적인 틀이 아닌 국제적인 틀로 받아들여 6자 회담과 같은 다자적인 틀에서 타협을 통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방안=박승준 인천대 교수는 “동북아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며, 국가 간의 순수한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줄 균형 잡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미국의 반대를 비롯한 오래된 정치적 갈등으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 실현을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또 “한국의 경우 북한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경제 공동체 구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북한을 적극 동참시켜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팡 중잉 중국인민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동북아는 포기를 제외하고 이미 약속국이 없는 시대에 진입했다”라며 “이제 동북아 3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으며, 아시아연맹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팡 교수는 “동아시아는 새로운 강대국의 공조, 더 나아가 아시아지역연맹의 건립을 필요로 한다”라며 “이제 보다 높은 곳에서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아시아 지역질서를 설계하자”고 주장했다.

오가와 에이지 히토츠바시 대학교 부총장

은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역내 공동 통화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라며 “ACU(아시아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 수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ACU 사용을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평화변영을 위한 제안=동북아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서 보다 발전적인 동북아의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10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선 한·중·일 3국 민간 차원의 ‘동북아 위원회’ 구성과 동북아 공동체 논의에 북한 참여 및 2012년 한·중·일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을 제안했다.

또한, ▲자연재해·기후변화 등의 문제와 관련한 동북아 공동의 위기관리 체계 구축 ▲북한의 외교적 고립상태 해소를 위한 북·일 수교 적극 지지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즉각 재개 ▲경제통합, 과학기술 등의 통계 표준화를 위한 동북아연합통계체(ASIASTAT) 구성 ▲한·중·일 3국 원자력 협업체 창설 ▲동북아 개발은행 창설 ▲한·중·일 FTA의 조속한 체결 ▲행정·문화예술·관광, 스포츠, 학술 등과 관련한 지자체·경제단체·시민단체 등의 3자 교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중·일 3국의 동북아 공동체 논의가 보다 힘을 발휘하고, 내실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영하는 동북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제회의를 주최한 동북아 위원회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온 동북아 평화협력을 계승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민간차원의 국민운동기구로 창립됐다. 동북아 위원회는 창립 첫 사업으로 이날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며, 이후 전국 각 지역과 계층, 해외를 망라한 민간단체로 오는 9월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최현백기자 cki@kwangju.co.kr

시·군·구 통합기준 8월 공포

인구·지형·생활권·경제권 등 거론

지방행정개편추진위 13일 광주서 토론회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위원장 강현욱)가 오는 13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중인 ‘시·군·구 통합기준에 관한 연구’ 발제에 대해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안완기 전남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안완기 전남대학교 교수, 한병규 전주경실련 사무국장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진위는 11~14일 권역별 토론회를 토대로 8월까지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포할 계획이다. 통합기준으로는 인구·지형·역사상·생활권·경

제권·발전가능성 등이 자치구 통합 기준은 인구·면적·생활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진위는 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를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분석해 내년 6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자치단체로 살려두면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해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에 보고한다.

추진위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4년 6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시·도교육청, 전남대병원 장애인 고용 저조

고용부, 852곳 명단 공개

광주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 전남대병원 등이 지역 공공기관들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39곳, 공공기관 64곳, 민간기업 749곳 등 모두 852곳의 명단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관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 3%(공무원 신분인 아닌 기관 2.3%)에 미달한 모든 기관이며,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비율인 2.3%에 현저히 못 미친 곳(1.3% 미만)이다.

공공부문에서 광주교육청이 상시 근로자 1만939명 중 장애인이 164명으로, 의무고용인원 329명의 절반에 불과, 장애인고용률이 1.50%에 그쳤으며, 전남교육청 역시 1만8874명 중 406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고용률이 2.15%였다.

또 전남대병원 역시 2644명 중 장애인은 30명으로, 고용률이 1.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지방의원, 사회복지관 대표 등 겸직 못한다

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방의회 의원은 문화재단이나 사회복지관, 자유총연맹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곳의 대표나 임원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과 단체,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에서 대표나 임원, 상근직 직원, 의결권이 있는 위원회의 장이나 위원을 맡을 수 없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featuring premium beef and various dining options. Includes contact info: 062)671-1199, You Square Terminal 2nd floor CGV.

Advertisement for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2010 Korea Food Expo COEX) featuring chef Park Man-sun's signature dishes. Includes contact info: 062)671-2177, 1177.